

2024-12-03

율촌 입법 위클리

Yulchon Weekly Legislation Report

2024-27호 (2024년 12월 3일)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11월 11일 (월)부터 11월 29일 (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은 20건 이상으로, 이 중 대다수의 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규제 강화, 독립이사 비율 확대, 집주투표제 의무화 등도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M&A, 공모펀드,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M&A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공시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담고 있으며, 21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기본법안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안(대안)」과 단말금보조금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 소관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위클리 포커스 **바로가기**

- Focus 1. 이사의 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 정리
- Focus 2.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동향

II. [국회] 입법 동향 **바로가기**

- ① 본회의 의결 법안(2024년 9월 26일)
- ② 소관위 의결 법안
- ③ 신규발의 법률안
 - 상법·자기주식 처분·이사충실의무 관련 법안
 - 공정거래·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 의료제약 관련 법안
 - 전자상거래·유통플랫폼 관련 법안
 - 상표·지적재산권 관련 법안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바로가기**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시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IV. 주요 입법 정책 자료 **바로가기**

- 정부/공공기관 정책 보도자료
- 정부기관 정책 및 연구 보고서
- 주요 세미나 / 공청회 / 간담회

Focus 1. 이사의 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 정리

-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은 20건 이상으로, 이 중 대다수의 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또한 정부 발의안을 포함하여 6건의 법률안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규제 강화, 독립이사 비율 확대, 집주투표제 의무화 등도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입니다.

주요 상법 개정 법률안(계류 법안)

- | | |
|--------------------------------------|---|
| • [22057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8인) | • [22027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차규근 의원 등 30인) |
| • [22056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의원 등 10인) | • [220257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의원 등 17인) |
| • [22053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의원 등 10인) | • [22018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의원 등 11인) |
| • [220517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6인) | • [22010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 • [22047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의원 등 13인) | • [22006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의원 등 12인) |
| • [220470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 • [22006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
| • [22045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 • [220045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
| • [22044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9인) | • [22004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
| • [220447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의원 등 10인) | • [220035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
| • [22043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 • [22001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
| • [22036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 • [22001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
| • [22028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 |

1.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적 분할, 합병 등의 과정에서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이에 대다수의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주주'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남근 의원안(2204475)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여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를 위해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강일 의원안(2204732)은 이사의 직무 수행 시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는 '공정 의무' 조항 신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민병덕 의원안(2204381)은 이사가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의 투명한 의사 결정과 지배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물적분할, 합병, 주식병합 등에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방안

- 소수주주는 정보와 영향력이 부족하여 지배주주나 경영진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물적분할, 합병, 주식병합 등의 과정에서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개정안은 물적분할, 합병, 주식병합 등에서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및 활성화 방안

- 현행 상법은 현장 주주총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정이나 거리상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다수의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집중투표제 도입 확대 및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범위

-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정문(2205704), 박균택 의원안(2204700)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의원안(2204475)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아니한 상장회사가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 변경을 하려는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김성원 의원안(2205630)은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집중투표 도입 또는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의결권 제한 폐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5. 경영진 자율성 확보

- 김성원 의원안(2205630)은 다른 법률안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이사의 특별배임죄 폐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등 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영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Focus 2.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동향

-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M&A, 공모펀드, 공모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M&A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공시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1월 20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담고 있으며, 21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모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공모도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 공모도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M&A 제도개선 관련 사항 (2024-11-26 시행)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열사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간 자율적 교섭을 보장
외부평가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 •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외부평가기관의 품질관리규정 준수 및 점검결과 공시를 의무화
공시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 합병 반대 이사의 반대사유

(2)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관련 사항 (입법예고 2024-11-20 ~ 2024-12-30)

ETF 투자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 •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이중 운용보수 수취를 금지
대체투자 평가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연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 • 외부 전문기관(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의 최근 1년 이내 평가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시행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3)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입법예고 2024-11-21 ~ 2024-12-31)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로 매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 • 위반 시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 종목별 잔고 관리 - 공매도 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 -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기관투자자(97개사)의 추가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투자자(97개사)의 추가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시스템을 통한 잔고 관리 -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2영업일 이내 정보 제출 -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및 거래 시 제출

관련자료

[보도자료]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바로가기](#)

[보도자료]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바로가기](#)

[보도자료]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바로가기](#)

① 본회의 의결 법안(2024년 9월 26일)

법률안	주요 내용
<p>본회의 의결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2205976 / 2024-11-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계적으로 유망한 신산업인 '푸드테크'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신규 법률 제정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
<p>본회의 의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5973 / 2024-11-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
<p>본회의 의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5978 / 2024-11-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명시하고, 기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여 식량안보를 강화 양곡의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 기준 이상으로 미곡가격이 급격히 하락·상승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② 소관위 의결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p>소관위 의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DD20131 / 2024-11-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함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 누적 연산량이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 식별·평가·완화 등 필요조치를 이행해야 함
<p>소관위 의결 디지털포용법안(대안) DD20133 / 2024-11-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포용'은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와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대체수단을 보장하고 그 역기능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법률안	주요 내용
<p>소관위 의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DD20132 / 2024-11-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지원금으로 정의함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 이동통신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함
<p>소관위 의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DD20155 / 2024-11-28 / 행정안전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에 실시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금고·중앙회의 일부 간부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 금고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50% 이상에서 80%로 상향하고, 금고 잉여금 중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 새마을금고가 보험업법상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부실채권 매입·처리를 전담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신설 대규모 금고에 상근감사 선임의 의무화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며, 중앙회 이사 수를 21명에서 26명으로 확대
<p>소관위 의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5949 / 2024-11-27 / 보건복지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실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p>소관위 의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5953 / 2024-11-27 / 보건복지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p>소관위 의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DD20105 / 2024-11-2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지원해야 할 콘텐츠의 범위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부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법률안	주요 내용
<p>소관위 의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DD20106 / 2024-11-2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법원은 손해가 인정되거나 손해액 입증에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고의성 정도, 피해규모, 경제적 이익, 위반기간, 벌금,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하도록 함

③ 신규발의 법률안

상법·경영판단의 원칙·이사충실의무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p>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205630 / 2024-11-15 / 법제사법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의 특별배임죄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 복수의결권주식을 새로 도입하여 기업의 방어수단을 마련 이사의 경영의사결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보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경매하여 그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함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
<p>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8인) 2205704 / 2024-11-19 / 법제사법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 의사결정과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
<p>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2205658 / 2024-11-18 / 법제사법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시 서명 및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 온라인 총회 참여가 보편화됨에 따른 전자적 의결 수요에 대처하여, 사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금융·보험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2205423 / 2024-11-11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담보권, 채무 등을 추가하여 종합 재산 관리 기능을 강화 • 신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탁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비금융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요건, 등록의무, 한도, 가격산정 기준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 또는 위탁판매되며, 계열사 판매한도 등을 규율 • 수시공시, 신탁보고서 작성·제출·공시, 수익자집회 운영, 투자설명서 제공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2205425 / 2024-11-11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서비스로 시행 중인 '비금융자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제도'를 자본시장법에 도입할 계획임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 신청 대상에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의원 등 10인) 2205521 / 2024-11-13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 지속가능성 공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 • 다만 Scope 3 배출량 등 공시 요구사항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시행 첫해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부실공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205681 / 2024-11-19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되,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증권 거래 중개업무와 관련해서는 일부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거래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를 허용 •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에서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205683 / 2024-11-19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분산원장 등록주식등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6인) 2205841 / 2024-11-25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2205874 / 2024-11-26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 • 동시에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

법률안	주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206042 / 2024-11-29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 신주의 100분의 25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 중 물적분할 당시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신주인수권을 부여

공정거래·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2205992 / 2024-11-28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 하고 조사대상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기간과 그 연장사유를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2인) 2206030 / 2024-11-28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206037 / 2024-11-28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상법상 대형 상장 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과반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를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의원 등 10인) 2205538 / 2024-11-13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벌대기업들이 이사회 구성, 임원 전문성 요건, 경영승계 등에 관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2205832 / 2024-11-25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가 물품등의 용량 및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승의원 등 14인) 2205863 / 2024-11-26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유통업자가 50% 이상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의료·제약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2205449 / 2024-11-11 / 보건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품질관리 기술지원,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하도록 함 생약안전연구원의 설립·운영, 사업 내용,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임직원에게 공무원 벌칙 규정을 적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1인) 2205513 / 2024-11-13 / 보건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중개업자 등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업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중개업자 등이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2205550 / 2024-11-14 / 보건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제약산업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 우수한 CRO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CRO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2206024 / 2024-11-28 / 보건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환자의 이해를 돕고,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뿐만 아니라 심평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사로부터 통보받은 동일성분조제 내용을 해당 처방의사에게 알리도록 하여 의사-약사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함

전자상거래·유통플랫폼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3인) 2205665 / 2024-11-18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판매업자 신원정보 제공의무, 온라인 판매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인접지역 거래에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 유료전환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료전환 시점에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전고지 및 통지를 허용 검색결과, 순위, 이용후기 등의 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신설하고, 맞춤형 광고 제공 시 그 내용과 방법을 고지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9인) 2205923 / 2024-11-27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2205831 / 2024-11-25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전자지급수단으로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판매대금 유용을 막고자 함

법률안	주요 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2205946 / 2024-11-27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포함해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종사자의 집화, 배송 등 계약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종사자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시간 범위를 1주 60시간으로 한정하여 택배종사자 과로를 방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2205830 / 2024-11-25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지능정보기술 배차방식, 배달요금 등에 대해 배달종사자에게 설명하고 이견 제시 시 협의에 응하도록 함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정하여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사업자와 배달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금지함

상표·지적재산권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2205802 / 2024-11-2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따른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상표법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로 인한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2205684 / 2024-11-1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신고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특허청장이 침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상표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주소가 없는 일정 기준의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2205507 / 2024-11-1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저작물이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표시 의무와 그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I. 위클리 포커스

II. [국회] 입법 동향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IV. 주요 입법 정책 자료

시행령·시행규칙 의결 및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2024-11-11

대상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입법 예고	2024-11-11 ~ 2024-12-23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기존의 제작사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증 절차는 배터리 제작, 인증신청, 안전성 시험, 인증서 교부, 안전성인증 표시·판매, 적합성 검사 순으로 진행 안전성 시험은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12개 항목에 대해 실시되며, 3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적합성 검사를 실시 배터리 이력관리제 - 개별 배터리에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이력을 관리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 2024-11-26

대상 법령	방문판매법 시행령
시행 일자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과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일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개별재화 가격 상한 등 주요 규제가 면제됨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의 방문판매 실적은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행정규칙 의결 및 행정예고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 2024-11-12

대상 법령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시행 일자	2025-05-13 (자격요건 관련 조항은 2027년 5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가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에 대한 감독 및 취약점 개선조치 승인 등의 책임을,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총괄하고 개선하는 책임을,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여부와 보고책임자 감독을, 보고책임자는 의심거래 보고와 내부통제 체계 점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함 •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임명하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은행권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대형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차하위직급 이상 등 최소직위 요건을 도입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시행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 2024-11-25

대상 법령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시행 일자	2024-11-25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창업기업(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개시 7년 이내 기업으로서, 국내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국내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해외기업 투자제한대상에서 제외 • 일반지주회사 CVC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투자내역에 피투자기업의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개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 2024-11-19

대상 법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행정 예고	2024-11-19 ~ 2024-12-09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왑(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신규 제정함 • 채무보증의 실질과 효과가 발생하는 TRS 거래를 탈법행위로 규정

정부/공공기관 정책 보도자료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수립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2024-11-14

- 정부는 2024년 11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PF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230조 원 규모의 PF 시장에서 자기자본비율이 5% 내외인 상황을 개선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 위한 규제체계 개선 추진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 2024-11-21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024년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 신의료기술평가는 최대 490일이 소요되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시장진입 기간이 80일~140일로 대폭 단축됩니다.

정부기관 정책 및 연구 보고서

2025년 경제전망과 정책시사점 [바로가기](#)

한국금융연구원 / 2024-11-23

-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2024년 2.2%에서 2025년 2.0%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4년 2.4%에서 2025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025년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 부진 지속과 수출 둔화로 성장세가 제한되고, 경상수지는 680억 달러의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바로가기

자본시장연구원 / 2024-11-22

- 자본시장연구원은 현행 금융회사의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ICT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금융회사 서비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에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망분리 규제의 방향성은 망분리 방식에 대해 금융회사의 선택권을 인정하되, 금융전산 보안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데이터 분류의 표준화, 규제샌드박스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생성형 AI와 SaaS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요 세미나 / 공청회 / 간담회

주제	주최	일시 및 장소
K-OTT/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한민수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12.3 (화) 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	박지혜·신장식 의원실 외	12.3 (화) 14: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한국 미래 신기술 발전을 위한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 조찬포럼	정일영 의원실 외	12.4 (수) 07: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12.9 (월) 10: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노동포럼(이학영· 이용우·신장식의원실 등)	12.10 (화) 10: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국회철강포럼 어기구·이상휘·권향엽 의원실 외	12.10 (화) 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전현희·조정식·차지호 의원실	12.10 (화) 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에너지AI 정책방향과 과제	조승래·이인선 의원실	12.11 (수) 13:3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중대(시민)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토론회	박용갑 의원실 외	12.18 (수) 10:3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입법지원팀

기업의 규제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 및 입법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이러한 기업의 규제 및 입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지자체의 조례, 관계부처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해석과 제개정, 사안별 적용 여부 분석과 함께 개별 부처 또는 유권해석 기관 응대를 통한 규제 대응 방안, 국회 국정감사등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상시적인 입법·정책·규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별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전문 입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 및 입법 대응 전문팀으로, 풍부한 네트워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변호사



이강민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



장재형 사무사



구기성 고문



김동석 수석 전문위원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



윤여훈 전문위원